더불어민주당	보 도 자 료	2021. 12. 26. (일)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32 -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에너지 기본권을!"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공약 발표

○ 기후변화 따른 폭염·한파 빈발에 취약계층 에너지 빈곤 점차 심화

○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 확대, 저소득층 거주 노후 주택 에너지효율개선사업 확대, 지자체 전담 인력 운영 등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32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공약을 발표했다. 폭염과 한파 등 혹독한 기후변화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빈곤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재명 후보는 "재작년 여름 서울은 111년 만에 최고기온을 기록했고, 작년 여름에는 역대 최장 장마가 찾아왔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잦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혹독해지는 기후로 어려운 분들의 계절나기는 갈수록 고달프다"고 말한 뒤, "낮은 소득, 낡은 주택, 냉난방 설비 탓에 어려운 분들의 연료비 부담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실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상당수가 에너지 빈곤층으로 분류된다. 에너지 빈곤층은 전체 소득 중 연료비 비중이 10%를 넘는 경우를 지칭한다. 필수 생활용품으로 자리 잡은 에어컨의 경우 서울 소재 저소득가구는 18%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정부가 에너지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저소득가

구에 한정돼 있다”며, “기후변화의 시대 어려운 분들의 에너지빈곤도 시급히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해결 방안으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부로 한정된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의 확대를 공약했다. 1년에 약 200억원 예산 투입으로 폭염 및 추위에 시달리는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저소득층 중 절반 이상이 20년 넘는 노후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노후주택에 대한 단열, 냉방기기 지원 등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을 더욱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자체마다 전담인력을 운영하여 이른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 후보는 “모든 국민이 보편적인 에너지 기본권을 누리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에너지복지를 확대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건강, 안전 및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9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169만 가구 중 에너지바우처 대상 가구는 87만 가구로 전체 대비 51.5%만이 지원받고 있다. (끝)

[참고자료]

□ 에너지복지 현황

○ 에너지복지 개념 및 법적 근거

- 모든 국민이 **소득과 관계없이 기초적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 또는 모든 국민이 **소득과 관계없이 에너지 빈곤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는 제도

* 「**에너지법**」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⑤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

○ 에너지 빈곤의 원인

- 낮은 소득, 에너지 가격, 노후 주택, 저효율 기기 및 설비로 인한 비효율적 에너지 사용

* 가처분소득 대비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 (10분위별 연료비/처분가능소득 (1분기 월평균))

- 1분위 : 27.4%('06년) → 40.7%('11년) → 26.4%('15년) → 25.1%('16년)
- 2분위 : 11.2%('06년) → 14.4%('11년) → 12.7%('15년) → 11.5%('16년)

○ 에너지복지 사업의 종류

- 에너지공단의 에너지바우처 사업, 한국광업광물공단의 연탄보조사업, 한국에너지재단 난방유/연료/전기요금 지원 사업,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전기 및 도시가스요금 할인 등
- **(에너지바우처)** '21년 지원대상은 87.8만 가구이며, '20년은 65.4만 가구 지원

* 온도변화 취약, 에너지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요구되는 계층 중심으로 지원대상 확대

- **생계·의료급여**(중위소득 40%이하) 中, **노인, 장애인, 영유아**('15) → **임산부**('16) →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18) 포함 가구, **한부모 및 소년소녀가정세대**('19)

■ (에너지바우처 **지원 예산**) **'21년 예산**은 **967억원 (에특회계)**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지원가구수	49.5만	52.4만	54.6만	56.5만	63.3만	65.4만	**87.8만**
예산(억원)	452	487	512	612	667	720	**967**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단가)** 가구당 **약 11.8만원**(하절기 0.9만원, 동절기 10.9만원)

■ 2016~현재까지 에너지바우처 제도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 높음**

- 77점('16) → 81점('17) → 78.8점('18) → 81.3점('19) → 82.1점('20)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기후기금)

-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에 단열, 창호공사 및 냉방기기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 ('19년부터 하절기 냉방기기 지원)
- **(지원예산) '21년 예산은 냉방지원**(102.3억원) **포함,** 전년 대비 11.3% 증가한 **869억원**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지원가구수	29,468	26,128	30,385	**34,195***	**33,233**	**33,000**
지원 예산	489억	489억	639억	**819억**	**767억**	**869억**

* 포항 추경사업(121억원) 포함

- **(지원대상)** 저소득층 3.3만 가구, 사회복지시설 190개소

□ 에너지복지 지원 문제점

○ 에너지복지 지원대상 협소

- 에너지빈곤층은 저소득가구이며, **저소득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구분**
- 에너지바우처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주거·교육급여대상자는 제외되고,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등 지급으로 **사각지대 발생**
- 소득 대비 연료비 지출 비율로 산정하고 있어 노인가구, 1인 저소득층 등 연료사용 절약 가구 및 기초적인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소비 기준보다 적게 소비하는 가구 제외
- 소득기준에서 탈락하는 가구의 잔여소득이 실질적으로 매우 낮아 연료비 부담이 큰 경우는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임

○ 에너지 구입비용 지원 위주의 복지정책

- 해외 선진국이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국내 에너지 복지정책은 바우처 제공 또는 요금할인 등 에너지 구입비용 지원에 대부분 예산 투입

* 요금할인 및 연료비 지원(각각 비중) : '15년 82.5%(71.4%, 11.3%) → '18년 90.1%(81.6%, 8.5%)

** 에너지효율개선 : '15년 17.2% → '18년 9.9%

○ 난방에너지원에 따라 지원액의 차이 발생 ('20년 기준)

- 지원액을 종합하면 도시가스 난방가구는 연 37.3만원, 연탄 난방가구는 61만원, 기타(프로판/부탄, 전력, 등유 등) 난방가구 20.4만원으로 난방연료에 따라 차이 발생

□ 국내 에너지복지 개선방향

○ **(에너지복지 대상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원대상 확대 필요**

- '21년 기준 에너지바우처 대상 87.8만 가구, 에너지효율개선 대상 33,000 가구

* '21.9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69만 가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23만 가구

- (확대필요성) 에너지바우처의 경우, 지급대상자의 만족도가 높고, 정부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 확대범위는 내년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

* 산업부는 '15년 에너지바우처 시행 이후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22년 에너지복지실태조사(최초)를 실시하여 지원대상 확대 범위 결정 예정**

- 산업부와 기재부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에너지 취약계층으로 포함하여 확대 필요성에 공감. 다만, 차상위계층은 어디까지 포함할지 면밀한 검토 필요 의견
- **(예산추계)**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복지 대상으로 확대 시, ' 21년 가구당 11.8천원 가정

* 81.2만 가구 × 118,000원 = 958억원, ('20년 대비 '21년 예산 247억 증액 감안시 충분히 가능)

○ 기후변화로 인해 난방뿐만 아니라 **냉방 부문에서도 에너지복지 제도 확대 필요**

- 2019년부터 에너지바우처 사업에서 냉방에너지에 대한 지원 시작
- 기후위기 시대 폭염과 태풍 등 이상기후 현상 일상화

* '18년 기록적인 폭염: 폭염일수 역대 최고, 서울 39.6℃(111년만에 일 최고기온)
** '19년 7개의 태풍, 평년 3.1개의 2배
*** '20년 최장 장마, 중부 54일, 제주 49일로 역대 최장기록

- 우리나라 일반가구 에어컨 보급률은 87% 이상으로 추정(한국갤럽, 2018)
- 서울 소재 저소득가구의 에어컨 보급률은 18% 수준(서울연구원, 2019)

* 전력거래소 '2019 주택용 가전기기 보급현황 조사보고서', 2019년 가구당 0.97대 보유

○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확대 필요

- **소득 1·2분위**는 **20년 이상 지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이 57.5%**, 이 중 31년 이상 주택 거주비율이 30.9%로 평균치인 16%와 큰 차이('18년 국토부 주거실태조사)
- 에너지복지 대상가구 중 도시가스 외에 **등유, 연탄 등으로 난방하는 비율이 61.2%를 차지**하고 있어 지원액의 차이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 차원의 에너지원 전환 필요**

○ 에너지복지 수혜 대상자들의 거주지 위치와 지형 등에 따라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차등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필요**(중장기)**

- 강원과 충북처럼 위도가 높거나 내륙에 위치한 지역의 가구당 에너지 소비가 많은 반면 부산, 경남, 제주 등의 소비량은 크게 작음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저소득가구 표준주택의 적정 지원금액 상향 필요(중장기)

- 현재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가구당 평균 200만원선. 최대 300만원 이하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진단'을 통해 표준주택의 적정 지원금액 산출
- 권익위는 '10.12월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가구당 상한금액 증액' 개선 권고

▸권익위는 '10.12월 현재 가구당 100만원인 지식경제부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과 170만원인 보건복지부의 '주거현물급여' 상한금액이 **국토부의 '주택개보수사업' 상한금액과 같은 60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권고**

○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측면) 지역 우선의 중소기업 방안 마련**(중장기)**

-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대기업 프렌차이즈 참여하는 문제점 개선
- 판로지원법의 '직접생산확인제도'를 도입하여 지역 우선의 직접생산 중소기업 우대정책(울타리) 추진

※ 직접생산확인제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제9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할 시 해당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